

보도자료

보도일시 [지면보도] 2021년 2월 27일(토) 조간부터
[인터넷 기사] 2021년 2월 26일(금) 14시부터

[연구관련]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044-287-6405, parksj@kli.re.kr)
담 당 자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
(044-287-6407, shin@kli.re.kr)

김대호 한국노동연구원 홍보전략팀 팀장
(044-287-6041, helcyon@kli.re.kr)

배포일시 2021년 2월 26일(금) 11시 25분

소규모 주류제조업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 본 연구는 지난 2012년 주세법 개정 이후 일련의 규제 완화가 주류산업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주류산업 현황

○ 2018년 기준 국내 주류시장 규모는 9조원(출고금액 기준)

- 현재 980개 사업체에 9,423명이 종사
- 출고량, 출고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수요변동성도 낮음
- 기호식품인 관계로 식품/식품첨가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생산량 11.0%, 매출액 7.8%(2018년 기준)

<표 1> 주류제조업 종사자 및 주류출고량 추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개)	848	935	955	926	925	980
종사자(명)	8,376	8,867	9,123	9,331	8,996	9,423
출고량(천 kl)	3,921.1	4,014.9	4,073.6	3,995.8	3,974.5	3,931.8
출고금액(십억)	8,811.7	9,126.9	9,361.6	9,296.1	9,248.7	9,039.4

자료: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국세청(주세 신고현황)

2. 주류산업 규제완화 정책

- 주류는 오랫동안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었으나, 각국이 1990년대 이후 주류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는 2009년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술 산업 진흥 및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 2012년 이후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주류관련 주요 정책 및 규제완화 내용>

2009년 8월: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2011년 9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2013년 2월 주류제조 시설의 기준 및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2014년 4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한 맥주의 외부 유통허용

2016년 2월: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허용

2017년 7월: 상업적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통주 판매 전면 허용

2018년 4월: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 허용

2020년 2월: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탁주·맥주의 과세기준을 종량세로 변경

2020년 5월: 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단편적 규제개선→종합적·체계적 접근)

3. 주류소비 트렌드 변화와 주류시장 변화

가. 주류소비 트렌트 변화로 국산 주류 소비감소

-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음주가능인구 감소)
- 음주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규제(청탁금지법, 주52시간제)와 접대·회식문화 감소
- 건강을 중시하는 음주문화 확산(저도주 선호)
 - *1인당 알콜소비량 감소(2008년 10.2ℓ→2017년 9.3ℓ)
- 혼술·홈술문화 확산
 - ⇒ 국내주류 출하량감소(2010년 3,610천kl→2018년 3,436천kl)
 - 수입주류 증가(2005년 2.1%→2018년 12.6%)

나. 트렌트 변화로 주류 시장 변동

- 2000년대 들어 주류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변모

- 대중주(라거맥주, 희석식소주) 보다는 프리미엄주류 소비 증가로 수입맥주, 증류식 소주 소비증가
 - *2015~2018년간 주류 출고량은 9.7% 감소하였고 맥주는 14.9% 감소. 이에 비해 증류식 소주는 73.1% 증가
-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증가
 -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대다수가 수제맥주인 관계로 맥아 및 맥주제조업 사업장숫자 증가('16년 : 48개 → '18년 : 74개)

<표 2> 주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사업체				종사자			
	2016	2017	2018	증가율('16~'18)	2016	2017	2018	증가율('16~'18)
알코올음료제조업	926	925	980	5.8	9,331	8,996	9,423	1.0
발효주제조업	839	837	890	6.1	9,148	5,911	6,321	2.8
탁약주 제조업	653	648	680	4.1	3,070	2,927	3,094	0.8
맥아/맥주제조업	48	58	74	54.2	2,365	2,275	2,479	4.8
기타 발효주제조업	138	131	136	-1.4	713	709	748	4.9
증류주 및 합성주제조업	87	88	90	3.4	3,183	3,085	3,102	-2.5
주정 제조업	10	9	9	-10.0	379	359	353	-6.9
소주 제조업	36	38	40	11.1	2,463	2,346	2,448	-0.6
기타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41	41	41	0.0	341	380	301	-11.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4. 주류 산업 정책 시나리오별 고용전망

- 현재 주류산업 여건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 주류 산업 고용인원은 11,151명으로 전망됨('18년 대비 3.4%증가)
- 주류산업 정책기조 변화와 규제 완화라는 두 축을 이용해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
 - *시나리오1: 기존 산업육성정책 유지 + 추가 규제 완화 없음
 - 시나리오2: 기존 산업육성정책 유지 + 추가 규제 완화 있음
 - 시나리오3: 산업육성 정책강화 + 추가 규제 완화 없음
 - 시나리오4: 산업육성 정책강화 + 추가 규제 완화 있음
 - * 추가규제완화 : 종량제 확대, 온라인 유통 허용등
 - * 산업육성정책 : 기업지원정책 등
- 2023년 추정치에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계수를 적용한 결과 2023년 고용인원은 10,757명~11,618명으로 추정됨

<표 3> 시나리오별 2023년 고용인원 전망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고용 증가율	-0.085	-0.004	0.010	0.042
2023년 11,150.7	10,757.0	11,107.5	11,267.4	11,617.9

- (시나리오1) 주류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소비패턴 변화, 주종 간 경쟁 격화 등)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여건이 지속되었을 때에 비해 고용이 감소
- (시나리오 2)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 폭을 상쇄하지 못함
- (시나리오 3과 4) 산업육성정책의 강화 및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용효과가 증대
- (시사점) 주류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정책이나 종량제 확대 및 온라인 유통 허용 등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주류산업 활성화 및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주류산업 활성화 정책 평가

- 1990년대 이후 일련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중장기 실천 로드맵을 구축하지 못했고 정책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시나리오전망에서 확인하였듯이 주류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적정선은 견지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규제완화 및 주류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책방안1: 우리술 진흥을 위한 조세 개편

- 농림부는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집중
 - ⇒ 주류제조업체들의 정책 체감도 낮음
-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역 내 주류업체 지원정책 추진 중
 - ⇒ 지자체 재정여건상 체계적·지속적 추진에 한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주류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해줄 필요 있음

⇒ 단기적으로 전통주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

- 지방세 전환 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전통주산업 육성 및 이를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기여할 것임

○ 정책방안2: 온라인 판매규제 완화 및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

- 유통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주류업계 또한 온라인판매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온라인판매 허용 시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문제 뿐 아니라 주종 간 갈등 확대, 도소매업자 생존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규제의 점진적 완화 및 온라인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정책방안3: 양조분야 전문인력 양성

- 양조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 차원에서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중요
- 주류제조관리사자격은 1999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미흡한 상황
 - * 현재 많은 주류 교육기관이 존재하지만 대다수가 단기과정
- 세계 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조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책방안4: 산업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우리술 산업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 필요
 - * 농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 일변도 정책 추진
- 주류산업 정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처를 지정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며 부처간 협력 체계를 도모. 끝.